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문제의 현황과 배경

강재태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았다. 별로 내키지 않는 원고청탁이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자의 전공과 지방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글이나 논문을 몇 번 적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신입생 입학식장에서 입학할 흥겨워하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모습에서 도리어 그들이 4년 후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연상하고부터는 시들해져 버렸다. 지방대학생들의 취업 문제는 외쳐봐야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뇌리에 은연중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도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방대학 교수로서 느낀 소회를 담담히 피력해 볼 따름이다.

1.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부진 현황

정부에서는 지방의 인재 누출을 막는 동시에 지방 인구 정착을 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지방대학 육성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별 산업특성과 관련된 지방대학의 특성학과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 졸업생의 우선 선발을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 적극 권장하는 한편,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학 졸업생에게 할당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여건은

계속 어렵기만 하고, 서울지역 대학과의 취업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전국 131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 180,664명 중 진학자 및 입대자 등 41,120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139,544명의 69.7%인 97,290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생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90년 15.3%, '93년에는 14.3% 였으나, '95년에는 서울이 77.6%, 지방이 66.7%로써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10.9%를 기록함으로써 그 격차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외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을 했느냐 못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학 졸업생으로서의 수준에 걸맞은 곳에 취업을 했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95년에 채용된 50대 그룹 신입사원 중 지방대 출신이 47.1%로 '94년 44.6%에 비해 2.5%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대졸 취업희망자 중 지방대 출신이 72%로 서울지역보다 2.5배 가량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서울 소재 대학 편중현상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는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관련 업체들의 서울 지역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녀를 자기 고장의 대학에 보내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라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지방의 교육기능을 경시한 터에 취업문제까지 겹치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자기 고장의

교육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지역 대학의 발전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필자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인 '70년대 초, 부산과 경남·북 지방에서는 경북대학과 부산대학을 서울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입시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서울대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 대학은 앓은 자리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겨난 지금은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가 큰 유인 요소가 되지 못하다보니, 합격선은 갈수록 떨어지고 여학생 입학률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 입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원해서 입학한 것만 그렇지 않았건간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출발에 부응하는 벅찬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지방대학을 졸업해 보았자 별 볼 일 없으며, 자기들이 배우는 전공이 장래 취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일찍부터 학과공부와 담을 쌓게 되고 '도서관 귀신파', '어학연수파', '끼어맞추기파' 등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 4학년이 되면 초조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취업보도부 앞 게시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원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실제 취업문은 좁은 문 정도를 넘어서 바늘구멍보다 작다. 특히 올해와 같이 불경기의 여파로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 때는 취업 '몸살'이 아니라 취업 '전쟁'을 겪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방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급기야는 운동권에 투신하는 학생들을 양산하게 된다.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지방대학생들은 시위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 순진한 학생들로 알려져 왔지만, 작년 연세대 한총련 사태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과격운동권의 주류는 지방대학생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소망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무한한 열등감, 소외감, 패배감을 경험한다. 소외를 느끼는 계층이 사회의 불만 계층이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96년 9월 말 서울대 『대학신문』에 “내 딸의 학우들에게”라는 한 학부모의 글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지난 학기 동안 책 한 권 읽지 않은 나태함’과 ‘선택된 자의 오만’을 담고 있는 딸에게 ‘노숙해진 퇴영’을 벗어나길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에 대한 비판으로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명문대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큰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수준은 고용기회, 임금수준, 직무안정성 정도와 사회이동기회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으로서 신분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되는 세상, 그렇기에 명문대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대학생들은 죽어라 공부를 해도 취직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2. 지방대학 취업문제의 배경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취업에 실패한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선

발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들의 탈락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취업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그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정 받았으며, 개인적으로는 불만스럽겠지만 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여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취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즉 사회계층이나 지역, 성별 등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전자의 관점에서는 취업의 사다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로 힘있는 소수만이 그러한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문제의 핵심은 지방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방대학생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들의 사회적 상층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 제도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경쟁하는 이론 중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있겠는가를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지방대학생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지방대학생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아직 많은 지방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성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지방대학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여학생들에게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느냐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하느냐의 결정에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겪는 취업상의 불이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 배후에 존재하는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이다. 한국 사회 제반 부분의 중앙집중 현상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현상이다. 이 중 경제력의 중앙집중화는 정치적·사회적 중앙집중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 '60년대 이래의 공업화와 경제발전은 결국 한국 사회의 중앙집중화의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권력뿐만 아니라 지리적 현상으로서의 수도권 집중이 어떤 행정 조치나 구상에도 불구하고 가속화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 낙후를 초래해 왔고 결과적으로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간판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자질이 뒤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생들의 성적이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지원 기회와 전형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물론 서울의 대학과 지방대학의 학생들 간에는 입학 시험 합격선 차이로 표시되는 격차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의 전부는 아닐 뿐만 아니라 4년 동안의 학창생활 중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방

대학 출신들은 인간관계나 근면성, 성실성 등의 정의적 측면에서 서울지역의 대학생들보다 낫다는 증거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지방대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다. 설령 업무수행에서의 능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이거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지방대학 자체의 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대학에서는 중앙에 의해 지역 대학에 가해져온 구조적 제약과 불이익에 대응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미진했다. 그들은 누적되는 취업문제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에만 급급했고,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학과 및 졸업생을 양산해 왔다. 물론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몰이해와 그 동안의 중앙집중 현상에 의해 지방교육이 그 기반을 상실하고 서울에 교육적으로 종속되었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대학에서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이나 서울 소재 대학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지방대학 나름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운영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능률’과 ‘형평’은 상호 이율배반적인 성장 목표이다. 따라서 이들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도 보이며, 하나의 추구는 다른 하나의 상실을 낳는 듯이 보인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책 우선 순

위는 '능력'의 추구에 있었다. 그 결과 지역 성장의 격차를 낳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 것도 이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은 물류비용의 증대와 노동시간의 낭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집중현상은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로서 우리나라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역간 형평의 문제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교육 문화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에 맞설 만한 문화적·지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의 우수대학이 서울의 우수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방대학의 분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지방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국가공

무원에 대한 지역대학 졸업생의 할당제나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대학 간의 인력 공유 제도 등 지방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일들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앞장서서 장애를 해소하고 초기 비용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취업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기회의 균등으로 일관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조건의 균등과 결과의 균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는 이러한 현상을 지향할 특별한 노력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화는 민심수습용이나 정치적 인기전술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대학 육성책 역시 중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껏해야 시혜적 차원에서 맴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빨리 지방화를 향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인재 지역할당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감재태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